

## II. 한우가격 동향 및 전망

정부에서 발표하는 한우산업에 대한 전망과 한우농가에 대한 지원책을 소개하여농가가 정부의 시책을 정확히 알고 대처하여 안정적으로 한우산업에 종사할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 1. 한우가격 동향 및 전망

- 큰 수소가격은 '98. 7월 168만원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회복되어 지난해말 최고 314만원까지 상승 후 현재 300만원대 유지
  - 큰 암소가격도 고급육 수요증가와 송아지생산안정제 등 번식기반 안정대책으로 전년말보다 높은 수준으로 상승
  - 암소수 감소에 따라 암송아지 가격도 강세로 나타나고 있음.

#### 【산지소값 동향】

(단위:천원)

구 분	'97	'98. 7	'99. 12(A)	2000.3	'00. 11. 1(B)	B/A(%)
큰 수소	2,426	1,681	3,098	2,537	3,052	△1.5
큰 암소	2,159	1,607	2,959	2,698	3,031	2.4
수 송아지	1,046	456	1,302	1,183	1,397	7.3
암 송아지	733	380	948	923	1,264	33.3

- 사육두수 감소로 소값은 계속 강세로 전망됨
  - 한우고기와 수입육간 시장차별화 진전 및 수입육에 의한 한우고기 부족물량의 탄력적 대체에 한계성 노출
  - 사육두수 : ('98)2,383천두 → ('99)1,952 → ('00.6)1,801 → ('00.9)1,713천두
- 개방이후 소값은 사육두수, 소득수준, 수입육가격, 품질차별화 정도 및 소비자의 신뢰도 등에 따라 결정
  - 향후 2~3년간은 사육두수의 급격한 증가가 어렵고 현재 이미 개방상황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소값폭락 우려는 적음.
  - 장기적으로 한우 가격안정을 위해 사육두수 안정과 품질고급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

## 2. 시장자유화가 한우산업에 미치는 영향

- 우리나라 쇠고기시장 '97년부터 수입쿼타가 모두 소진되지 못하는 등 사실상 완전개방 상태라 볼수가 있다.
  - 쿼터중 미수입량 : ('97)15천톤 → ('98)100천톤 → ('99)38천톤
  - 수입관세 : ('99)42% → (2000)41.6 → (2001) 41.2%
  
- 관련 전문가들은 2001년도에 쇠고기 시장이 개방 완료되어도 한우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 품질차별화 진전, 등급판매제도 정착, 구분판매제 실시 및 원산지 단속 등 부정유통방지 노력으로 한우고기의 고정적인 수요층 형성
  - 냉장육의 경우 유통과정관리의 어려움, 수입비용증가(냉동육 대비 25% 수준) 보관·운송 및 판매를 위한 유통체계 구축 미비로 수입량 증가에 한계
  - 생우의 경우도 해상운소, 검역, 계류과정에서의 비용과 질병·스트레스 등 예측할수 없는 위험이 커 수입가능성 희박
    - 도축용 생우수입보다 지육상태로 수입하는 것이 유리
    - 송아지도 수입비용과 위험발생도 이외에 사육환경 변화에 따른 사양관리의 어려움이 커 수입가능성 낮음
  - ※ 연간 생우검역능력 1만두 내외(계류능력 963두×10회)
  
-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수입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 개방초기 무역업자의 수입 가능성 탐색을 위한 수입 및 현재 높은 소값 및 송아지 부족현상 등 감안시 쇠고기 및 생우 수입 가능성 상존.
  - '91. 4월 일본의 수입개방 이후 동향
    - 소값은 '90년대 초 거품경제 퇴조의 영향으로 다소 하락 후 안정됨  
고급육을 생산하는 화우의 가격 하락폭(9~13%)은 적은 반면 수입육과 경쟁하는 젓소고기의 가격하락폭(29%)이 큼
    - 생우수입두수는 연간 10~20천두로 도축량의 1~2% 수준임  
300kg미만 송아지가 대부분이고, 300kg이상 도축용 큰소 수입은 미미함.  
육성우(300kg미만) : '91(20,710두)→'94(6,609)→'99(12,682두)  
큰 소(300kg이상) : '91(1,941두)→'94(1,473)→'99(292두)
  
- 개방이후 안정적인 한우산업발전을 위한 소값은 230~250만원 수준임 (환율 1,100~1,200원/\$ 기준)

### 3. 한우농가에 대한 지원 강화

- 송아지 생산안정제 기준가격을 100만원 수준으로 보장
  - 안정기준가격 90 → 100만원, 두당 지급한도액 20 → 25만원
  - 2001년도 송아지생산안정제 계약 : 지역축협
  - 청약기간 : 2000. 11월 ~ 2001. 3월
  
- 다산장려금을 상향조정
  - 3~4산시 10 → 20만원, 5산이상 20 → 30만원
  - 조건 :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에 참여한 암소에 대하여 지급
  - 2000. 11. 1일부터 태어나는 송아지부터 확대지급
  
- 거세장려금의 상향지원
  - 거세장려금을 두당 10만원 → 20만원
  - 2000. 11. 1일부터 거세한 한우부터 확대지급
  
- 우수축 출하포상금을 생산포상금으로 변경지급
  - 생산자 단체를 통해 계통출하되는 한우거세 수소에 지원
  - 2002년부터 거세장려금으로 통합지원

### 4. 새로운 WTO 농산물협상

본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농림부 국제농업국 국제협력과 (우 427-719)  
 전화 : 02-503-7291    팩스 : 02-507-2095

#### 1. UR협상을 했는데 왜 또 농산물 협상을 하는가?

금년부터 UR협상에 이은 새로운 농산물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협상이 없으면 외국 농산물이 더 많이 수입되어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우리 농업이 피해를 보는 일도 적을 텐데, 시장을 개방하는 협상은 왜 자꾸 하는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공산품은 이미 50년 전부터 꾸준히 무역장벽을 낮추고 보조금을 줄여 더 이상 낮출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장벽이 없어졌으나 농산물은 UR협상에서 처음으로 다루어졌으므로 아직도 공산품에 비해서 장벽이 높습니다. 그래서 UR협상에서 체결된 WTO 농업협정에 올해부터 추가 협상을 한다고 못을 박아 놓았고, 이에 따라 올해부터 협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협상으로 인해 농업분야가 피해를 본다는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나라는 WTO 회원국이기 때문에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주장을 펼치고 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반영시켜 변화하는 환경속에서 우리 농업이 더욱 새롭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2. 협상의 분위기나 여건은 어떠한가?

협상을 둘러싼 대외적 여건은 우리나라 같은 농산물 수입국들에게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농산물 수입국은 수적으로 열세이고 자유무역의 확대라는 WTO가 추구하는 방향에도 역행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입장에서 협상에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수적인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EU,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등 입장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협상을 급하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회 있을 때마다 농산물 협상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분야를 망라하여 포괄적인 다자간 무역협상(일명 뉴라운드)을 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3. 협상의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

WTO 농산물 협상이니 주요 쟁점은 간단히 말해 관세와 보조금을 얼마나 더 낮출 것인가입니다. 이러한 쟁점에 대해서는 이미 '97년부터 WTO 농업위원회에서 논의해 왔고 올해부터 농산물협상이 시작된 이후로는 몇몇 국가가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음으로써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협상내용은 크게 시장개방, 국내보조, 수출보조의 세 분야로 나눌 수 있으며 분야별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시장개방

시장개방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세감축이고 시장접근물량 확대 및 관리방법 개선, 특별긴급관세의 폐지여부 등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 『관 세』

UR협상결과 낮추기는 했지만 농산물 수출국들은 아직도 관세가 너무 높다고 보고 이번 협상에서 대폭적으로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세감축에 관해서는 주로 미국, 캐나다 등 농산물 수출국들이 구체적인 감축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캐나다는 관세가 높은 품목을 집중 감축하여 품목간 관세차이를 줄이고 국내 수급 상 필요하여 낮은 관세로 수입되는 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관세를 아예 없앨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미국은 관세를 상당수준 감축하여 국가간 관세차이를 줄일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 『시장접근물량』

수출국들은 다른 나라의 농산물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낮은 관세로 수입되는 시장접근물량을 늘릴 것을 주장하고, 국영무역 등 수입관리제도가 무역을 제한하거나 왜곡시키는 경우가 많으므로 철폐하거나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

국은 모든 시장접근물량을 상당수준 증가시킬 뿐 아니라 시장접근물량 수입이 어는 수준 이하일 경우 수입을 촉진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장하였고, 캐나다는 투명하지 않은 수입관리방법으로 인해 시장접근기회가 저해되지 않도록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에 대한 규범을 강화할 것을 주장 하였습니다.

#### 『특별긴급관세제도』

특별긴급관세제도는 UR협상 당시 만들어진 제도로서 관세화 한 농산물의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급락하여 국내 농축산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일정 기간동안 관세를 올릴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수출국들은 이 제도를 사용하는 국가가 적고 운용상 결함이 많으므로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제안서에서 이 제도를 철폐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수입국들은 수입수량제한이 완전히 없어진 상황에서 수입이 갑자기 증가하여 국내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나. 국내보조

국내보조 분야에서는 허용보조기준의 재검토, 감축대상보조의 감축 폭 및 감축방식, 그리고 생산제한 직접지불의 폐지여부 등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 『허용보조금』

허용보조는 무역왜곡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므로 정부가 자유롭게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관련 하부구조 건설, 구조조정투자지원, 친환경 농업직접지불제 등 많은 정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수출국들은 현행 허용보조 기준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느슨하게 규정되어 있어 각국이 무역왜곡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정책을 허용보조로 분류하여 감축의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보고 허용보조금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수입국들은 오히려 현행 허용보조금만으로는 농업의 비교역적기능을 살려나가기 어려움으로 그 기준을 완화하고 범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감축보조금』

감축보조금은 생산이나 가격에 영향을 주는 등 무역왜곡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정해진 계획에 따라 매년 줄여 나가야 하는 보조금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적인 것으로 쌀수매가 있습니다. 감축은 품목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품목별로 지급된 감축대상 보조금의 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어는 한품목에 대한 보조를 줄일 경우 다른 품목에 대한 보조를 늘릴 여지가 있습니다.

수출국들은 지금과 같은 총액 감축방식으로는 특정 품목에 보조금을 집중시켜 늘릴 수도 있어 당초 보조금을 줄인다는 취지와 상반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감축보조금을 총액 개념이 아니라 품목별로 나누어 각각 감축하고 감축폭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각국 농업총 생산액의 일정한 비율까지 감축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하여 국가간 보조수준의 불균형을 없애자고 제안하고 있고, 케언즈그룹은 감축보조금을 아예 없애자는 주장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입국들은 감축보조금의 대폭 감축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 『생산제한직접지불』

예) 정부가 농지의 15%를 휴경하는 것을 조건으로 고정된 수확량에 대하여 보조금을 주는 경우, 가축의 경우 사육두수를 10% 줄이는 조건으로 고정된 사육두수에 대해 보조금을 주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생산제한직접지불은 무역왜곡효과가 있지만 생산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주기 때문에 감축의무가 없는 보조금인데, 우리나라는 현재 이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생산제한직접지불을 실시하는 국가는 EU, 노르웨이 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수출국들은 이제도가 과도기적조치이며 무역을 왜곡하고 사용국가도 소수이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제한직접지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EU는 이 제도가 국내보조정책의 개혁에 매우 유용한 수단이고 감축대상 보조에 비해 무역왜곡효과가 적으며 앞으로도 농업 개혁의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므로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수입국들도 비록 이 제도를 사용하지는 않고 있지만 함부로 폐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 다. 수출보조

수출보조는 시장 왜곡 효과가 가장 크고 직접적입니다. 국내보조는 그것이 생산이라는 단계를 거치므로 무역왜곡효과가 간접적이지만 수출보조는 그대로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수출보조로 가장 많이 피해를 입고 있는 케언즈그룹 국가들은 수출보조는 감축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케언즈그룹은 수출보조네 관한 제안서를 가장 먼저 제출하였는데, 역시 이번 협상에서 수출보조를 완전히 철폐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고, 미국도 제안서에서 같은 주장을 폈습니다.

그러나 전세계 총 수출보조의 90% 정도를 지급하는 EU는 수출보조 철폐에 강력히 반대하면서 협상에서 수출보조뿐 아니라 수입국에게 장기저리융자를 제공하는 수출신용 등 수출보조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모든 조치들을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문제는 이번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4. 협상으로 인해 우리 농업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WTO 농산물협상으로 전보다 시장이 더 개방되면 우리 농업은 이제 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협상의 결과 우리 농업이 더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아주 심각한 타격을 줄 정도로 한꺼번에 급격한 변화가 오는 것은 아니며 관세나 보조금 감축도 상당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특히 보조금 분야에서는 협상결과 쌀수매 처럼 생산이나 가격에 영향을 주는 보조금은 더욱 감축해야 하겠지만, WTO에서 허용되는 정책은 얼마든지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난 UR협상의 경우를 되돌아 봐도 42조 투융자, 15조 농특세 등으로 정부지원이 UR협상 이전보다 오히려 늘어났는데, 이는 우리 정책을 UR협상 결과에 맞추어 전환해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협상 이후에도 우리 정책을 WTO 체제에 맞게 전환해 나간다면 농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 5. 협상에서 우리가 가장 신경써야 할 분야는 무엇인가?

협상결과 중 우리에게 가장 큰 타격을 미칠 수 있는 분야는 무엇보다도 시장개방 확대가 될 것입니다. 시장개방이 확대되면서 수입이 늘어나게 되면 국내시장에 가장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우리에게 중요한 품목의 관세감축이나 낮은 관세로 수입되는 시장접근물량의 확대를 최소화하는데 협상력을 최대한 동원할 계획입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품목별 시장개방의 영향을 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 6. 부는 농산물 협상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지난 UR협상 때는 준비가 부족했고 협상전문가가 없었고 무엇보다도 협상진행사항을 국민들에게 그때그때 공개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비판을 거울삼아 정부는 이번 협상에 대비해서는 오래 전부터 많은 준비를 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7월초에는 우리나라, EU,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모리셔스 등 여섯 나라가 공동으로 전세계 40여개국을 초청하여 노르웨이에서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참석국들은 식량안보, 환경보전, 지역사회 개발 등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은 시장원리만으로 해결될 수 없고, 이를 추구하는 것은 각국의 고유한 권리라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 대응체제는 분명 지난 UR협상 때와는 달라진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협상에 완벽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고 우리 농업의 장래가 걸려 있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하고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상 동향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협상과정에 충분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